



정치권 제기 핵심 의혹

“상품권 뒤에 ○○○ 있는거 알지”

성인용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임시국회 첫날부터 격돌했다.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유진통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등 핵심 현안이 결려있다는 점을 반영하듯 초반부터 정치 소동이 벌어지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 한나라당 등 야당은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다.

특히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성인오락게임 심의 과정에서 외부 로비 가능성과 정치자금 연루설 등이 포함된 게임업자들간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유진통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등 핵심 현안이 결려있다는 점을 반영하듯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초반부터 정치 소동이 벌어지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새로운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2004년 10월 22일 국무조정실에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심사 요청을 했으나 국무조정실이 이를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경품용 상품권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뀔 당시 일부 고위 인사 등이 문화부 관계자들에게 ‘특정 업체가 상품권 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의원도 “지난해 8월 자본잠식업체 2곳을 포함한 상품권 최초 지정업체 7곳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에 몸담았던 여권 인사가 관여한 의혹이 있

박형준의원 게임업자 녹취록 공개 파문 “상품권 지정업체 선정 여권인사 관여”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숙 의원은 “지난해 6월 사행성 게임과 게임용 상품권 문제에 대해 의원 35명이 함께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는데 그때 동의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광위 유리당 간사인 김재홍 의원은 “불법이나 직무유기가 있다면 먼저 감사원이나 검찰같은 국가사정기관이 조사를 한 뒤 미흡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발동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정권실세 개

입이라고 단정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21일 성인오락게임 심의 과정에서 외부 로비 가능성과 정치자금 연루설 등이 포함된 성인용 경매 관련 게임업자들간 대화 녹취록을 공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녹취록에는 “상품권을 000이 하고 0000이 하는 거 알지? 상품권 뒤에서”라는 말이 나오며 대화속에 나오는 두 사람은 노 대통령을 대선 후보때부터 적극 지원해온 핵심 측근들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이 상품권 사업에 관여했

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배경이 누구냐? 정치자금 아니야? 거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 이 사회가”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인 오락게임 심의 과정과 관련해 “심의는 위에서 결정해. 위에서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 파워 게임이야”라는 말도 있었다. 녹취록에는 이 밖에도 조직 폭력배, 일본 야쿠자 자금 유입설 등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녹취록은 게임업자간의 분쟁이 일어난 지난 4월 한 게임업자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검찰에도 제출했다”고 밝히고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조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의원(오른쪽)이 이계진, 이재웅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광부 상품권 위탁고시는 무효”

창원지법 판결...확정판 법률적 근거 없어

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사무임에도 문화부가 민간단체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권을 위탁해 ‘행정기관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만 부여했을 뿐, 위탁의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품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 속도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권한까지 포함돼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화부 고시에 의해 위탁된 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는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에 유통되는 27조원 가량의 상품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며 최근 들어 붓물처럼 쏟아지는 전국 다른 유사한 소송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지난해 12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마산시로 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취소 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관련 있다면 이 자리서 할복”

연루 거론 광주 국회의원들 펼쳐

사행성 성인 오락 게임 및 상품권 인허가와 관련, 정치권 연루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이름들도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광주지역 의원들은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하면서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구체적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정치권과 언론 등이 막연한 의혹을 무책임하게 유포할 경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인오락실 시장이 팽창할 당시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정동채 의원 측은 “바다이야기’에 어떤 흔적을 떠 주느냐”며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당시 성인오락실의 사행성 문제가 제기돼 오히려 문제

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 상품권 인허가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A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만약 내가 성인오락 게임과 관련이 있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할복하겠다”며 “나는 성인 오락 게임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한다”고 툭툭 튀었다. A 의원은 “어디서 그런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면서 “본인은 물론 주변 직원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단 1%의 근거도 없다”며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바다이야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갑자기 연루 대상으로 거론된 B 의원 측은 야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B 의원 측 관계자는 “바다이야기와 관련돼 거론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며 “문광위 소속도 아니었는데 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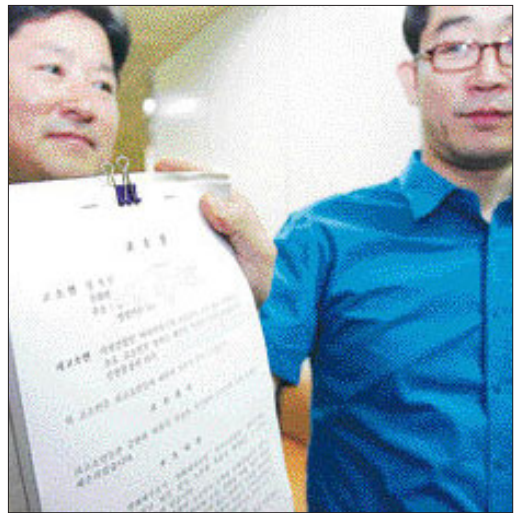
명계남씨, 네티즌들 고소

“정치인·언론사도 법적 대응”

영화사 이스트필름의 명계남 대표는 21일 사행성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업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다수의 네티즌들을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명 대표의 대리인인 김영술 변호사는 “공인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네티즌들은 명씨가 바다이야기 관련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사업 수익을 대선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곧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면 검찰에 직접 나와 바다이야기가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진술할 것이다”며 “네티즌 글과 유사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도 면책특권 내지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추가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게임 개발업체 사외이사를



명계남씨의 대리인인 김영술(왼쪽) 변호사와 이스트필름 김용석 이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검찰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았다는 모 언론 보도와 관련,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2000년 당시 일반 인터넷 3D 영상 게임업체에 사외이사직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노지원씨 “검찰조사 통해 진상 밝혀달라”

‘바다 이야기’ 파문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 노지원씨는 21일 “차라리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노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당당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지코 프라임이나 무한투자 측도 내가 이런 의혹에 관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우전시스템이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6억을 지원받았다고 하니 이는 모두 절차에 따라 받은 돈”이라며 “당시



보직이 기술 이사여서 (자금 지원) 심사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대통령 조카로 특혜를 요구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씨는 “차라리 검찰이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달라. 검찰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 조사결과 나와도 국민이 못 믿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나도 명예회복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미국 한의대 유학생 모집

해외에서 뛰놀며 나라사랑 배우자!

미국 한의대학은 매년 2만 5천 명의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2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후 한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1년은 국내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귀국 후 1년간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학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한의대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모집요건	모집대상
4년제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1997년 1월 1일 이후
· 학점률 2.0 이상	2006년 1월 1일 이후
· 영어능력: TOEFL 200 이상	2006년 1월 1일 이후
· 입학년도: 2006년 9월	2006년 1월 1일 이후
신청기간: 2006년 8월 15일 ~ 9월 15일	

문의처: 062)223-3379 Fax) 062-223-3868
핸드폰: 010-8807-3868 www.opi.co.kr

OPI 해외의약전문연수원 호남지부